

예산재정과

연번	세부사업명		
1	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시민체감 예산편성		개선
	1-1	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확대	
	1-2	재정효율화를 통한 예산 확대 편성	
2	국가투자예산 및 보통교부세 확보 강화		현안
	2-1	국가투자예산 확보 A·B·C 전략	
	2-2	보통교부세 확대 전략적 추진	
3	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책임경영 추진		개선
	3-1	공공기관 예산 건전성 확보 및 수익 구조조정	
	3-2	저출생 극복을 통한 공공윤리경영 강화	
	3-3	경영성과 및 책임보상체계 마련	

□ 추진배경

-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해결 사업예산 우선투자
- 예산 성과계획에 맞춘 투자·이월사업 심사강화로 재정 안전성 기여

□ 주요내용

1-1.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확대

- 목 적 : 예산 과정에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
- 시 기 : 연중
- 주요내용
 - 예산학교 운영 : (기존) 권역별 순회 교육 → (변경) 계층별 맞춤형 교육
 -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강화로 집행과정 주민참여 유도
 -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추진

1-2. 재정효율화를 통한 예산 확대 편성

-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사전컨설팅 시행
 - 목 적 : 대규모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 대비 컨설팅 지원
 - 시 기 : 분기별 1회
 - 수행기관 : 구미정책기획연구소(구미전자정보기술원)
 - 대상사업 : 중앙·도 재상정 사업, 대규모 전액 시비 사업
 - 내 용 :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및 심사 의뢰서 보완 컨설팅
- 당초예산 편성전 이월사업 사전 심사 강화
 - 목 적 : 대규모 이월로 가용재원 경직성 증가에 따른 해소방안 마련
 - 시 기 : (기존) 12월 이월조서 제출 → (변경) 9월 예산편성시 제출
 - ※ 당초예산 요구시 이월사업조서 병행 제출(예산심의 반영)
 - 대상사업 : 명시이월, 사고이월 예정인 사업

□ 기대효과

-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 가능
- 불필요한 예산낭비 차단 및 세출 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 재정 운용 기반 확보

▷(필요성) 매년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의 증가로 국가투자예산 및 보통교부세 확보 필수

▷추진방향

- 중앙부처 업무계획 및 국정과제 분석을 통한 전방위적 국비 확보
- 수요분석과 제도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대 추진

□ 주요내용

2-1. 국가투자예산 확보 Analyze · Build-up · Check 전략

구 분	시 기	대응전략
신규사업 발굴 [Analyze]	[12~2월]	중앙부처 업무계획 분석, 공모사업 연계 신규사업 발굴 국가투자예산 전략 보고회 개최
국비확보 활동 전개 [Build-up]	[3~4월]	경상북도 → 도 제출사업 우선순위 선점을 위한 업무 협의 주력
	[4~5월]	중앙부처 → 각 중앙부처 예산안 신청 전 주요 사업 설명
	[6~8월]	기 재 부 → 정부예산안 심의·조정 결과 파악, 기재부 집중 방문
	[9~12월]	국 회 → 국회의원실 협력 및 국회 예산안 심의 대응
성과 분석 및 전략 재정비 [Check]	[12월~]	국비 확보 최종 성과 분석 및 삭감·미반영 사업 차기 전략 수립 국비 확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(0.5점~1.0점)

↳ 부서별 건의·방문 실적 관리 및 추가 대책 등 피드백 강화

2-2. 보통교부세 확대 전략적 추진

1단계(1~3월)	2단계(4~5월)	3단계(6~8월)	4단계(9~12월)
당해연도 교부세 지표 분석	기준재정수요 분석 및 제도개선 건의	기초통계자료 작성 및 검증	보통교부세 총액 증액 건의
유사 지자체 비교 및 감액 지표 분석	기준재정수요 항목별 차이 분석 및 제도개선 건의	통계자료 작성 및 오류·누락 항목 점검	행안부 방문 건의(연중) *집중 방문 기간

□ 기대효과

- 국비 및 보통교부세 확보를 통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 동력 확보

담당부서 : 예산재정과 국도비확보팀 (☎2541)

□ 추진배경

-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증가, 수익 한계 등으로 출연금(운영비) 증가 추세
- 자율적 감독체계 확립으로 작지만 효율적 조직 운영 유도

□ 주요내용

3-1. 공공기관 예산 건전성 확보 및 수익 구조조정

- 기관별 자체 수입목표 설정·이행으로 과도한 출연금 의존경향 개선
- 출연금, 전출금,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반납 시행
- 제수당 통폐합 정비 등을 통한 기본급 위주 보수체계 단순화 개편

3-2. 저출생 극복을 통한 공공윤리경영 강화

- 저출생 관련 제도 개선 시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
- 자녀 양육 직원에 대해 승진·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기준 마련
- 기관별 상이한 육아휴직·휴가제도, 업무대행수당 통일 추진

3-3. 경영성과 및 책임보상체계 마련

- 각 기관별 특성에 맞춘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결과 환류
-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 차등지급 등 성과관리 보상체계 구축
- 우수기관 재량사업비 지급, 부진기관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

□ 기대효과

-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보장하되, 예산·조직·경영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다양한 환류체계 강화를 통해 책임경영 제고

담당부서 : 예산재정과 재정지원팀 (☎2551)